

## 저출산 원인과 정부의 정책방향



최 경 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인구대체 수준(2.1)에 있던 합계출산율이 불과 20여 년 만인 2004년에는 1.16명으로 급속하게 하락하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출산율 하락의 속도가 빠른 만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빨리 맞이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저출산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제2의 인구변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 속도로 인해 미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부족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증대되고, 학령인구·국방자원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경향은 직접적으로는 급격한 미혼여성 비율의 상승, 만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세,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세 등 인구학적 현상에서 기인하며, 사회경제적으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 높은 자녀양육 비용 부담, 여성의 가정과 취업활동간 양립 어려움, 청년층의 실업 증가 등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자녀수 1.5명을 가진 기혼 남녀 중 58%가 자녀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문제와 직장과 가사에 대한 이중부담 등으로 인해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추가출산 계획이 없는 주된 요인은 자녀양육의 부담과 가족지원망 부족,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무총리 주재로 총 9개부처가 참여하는 「‘희망한국21’-저출산종합대책」 수립 중에 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 출산율 제고라는 좁은 시야에서 탈피하여, ‘출산·육아·교육·주택·고용·가족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출산·육아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선진형 저출산 극복책을 마련해 내년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때에는 시민단체·여성단체·종교계·경제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 확산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출산 대책 민관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에 ‘OECD 주요국의 저출산대책 동향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전략도 우리의 고민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첫째, 만혼의 경향을 보이는 30세 이후 여

성들의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둘째, 결혼·출산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

OECD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① 보육인프라 확충, ② 탄력적 근무형태의 확대, ③ 양육비 지원(세제혜택과 현금지원) 등 3가지 정책을 OECD내 모범국가 수준으로 시행할 경우 출산율이 2.5명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희망이 가시화되도록 저출산대책에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국민통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등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선진형 저출산 극복책을 마련해 내년 초에는 발표할 예정이다.